

1. 다음 A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A : 원자재 가격의 급등
B :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을 인하를 들 수 있다.

[경제: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

A는 생산비용이 인상되어 총공급의 감소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고, B는 총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정답 ④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은 긴축정책이다. 재할인을 인하의 경우 확장정책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오답 ①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의 경우 경기가 위축되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②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경기의 활성화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중인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 ①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법과 정치: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민소환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오답 ① 국민들의 참여증가로 참여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가 촉진된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재량권은 증가한다.

④ 주민대표의 정치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 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법과 정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은 국제정치를 힘의 논리에 의한 균형관계로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① 국제사회를 세력균형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오답 ②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③ 주권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합의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④ 국제사회에서 반복적 상호작용에 의해 협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법과 정치: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정답 ③ 제시문은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오답 ① 관습형법의 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법률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④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A당	40%	60
B당	30%	40
C당	20%	0
D당	10%	0
전체	100%	100

(나)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E당	40%	40
F당	30%	30
G당	20%	20
H당	10%	10
전체	100%	100

* (가) 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증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법과 정치 : 선거결과의 이해]

(가)는 각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하는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해당한다. (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에 해당한다.

정답 ① ㄱ.(가) 국가의 선거결과에 비해 (나) 국가의 선거결과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일치 정도가 높다. 따라서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ㄴ. (가) 국가의 선거결과 양당제가 나타나게 되고 (나) 국가에서는 다당제가 나타난다. 다당제 국가의 경우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답 ㄷ.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100%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다.

ㄹ.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다.

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법과 정치 : 사회계약설]

(가)는 일반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루소의 사상, (나)는 저항권을 설명하고 있는 로크의 사상이다.

정답 없음

오답

- ①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했다.
- ② 자연상태의 인간을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는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의 특징이다.
- ③ 로크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로크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실정법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은 자연법으로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했다.

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구분	B재	C재
가격	상승	하락
수요(량)	증가	감소

-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교차 탄력성 : 한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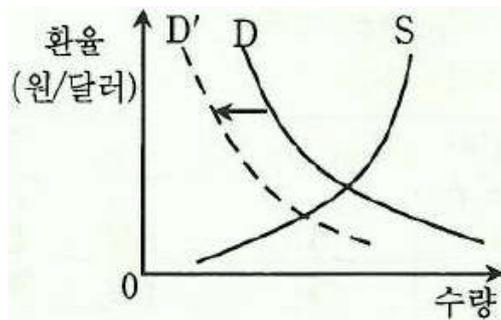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경제: 대체재와 보완재]

A재의 가격하락시 B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완재관계이고, C재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체재 관계이다.

- 정답 ① ㄱ.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는 보완재관계이다.
 ㄴ. 꿩 대신 닭은 대체재 관계를 설명한다.
 ㄷ. 대체재 관계의 경우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경제 : 환율]

외환시장에서 수요의 감소로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하락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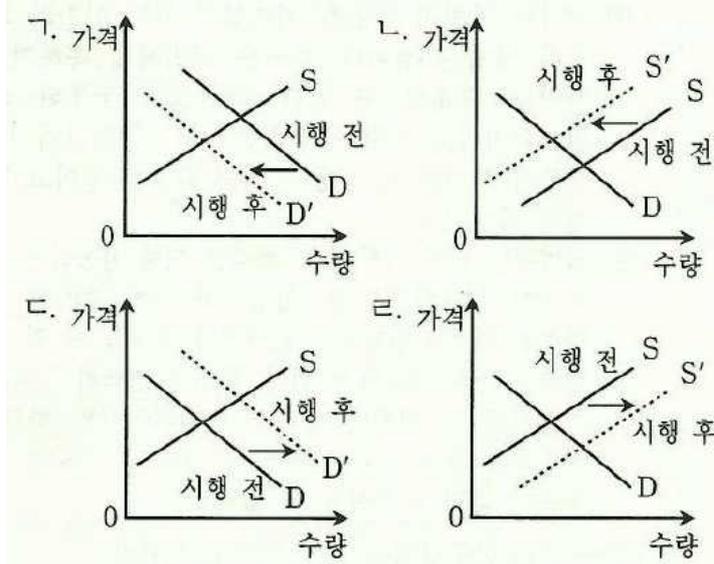
- 정답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은 외환의 수요요인이다.
 오답 ① 환율하락시 달러가치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한다. 수출증가시의 경우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대미수출 증가는 외환의 공급요인 증가이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 ㄱ | ㄴ | ② | ㄱ |
| ③ | ㄴ | ㄷ | ④ | ㄴ |

[경제 : 외부효과]

(가)는 소비과정의 외부불경제이고 (나)는 생산과정의 외부경제이다.

외부경제의 경우 장려해서 공급이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대책이고, 외부불경제의 경우 규제해서 공급이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대책이다.

정답 ②

1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구분 \ 연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물가상승률	4%	4%	2%	3%
실질경제성장률	7%	5%	3%	2%

- 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경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정답 ③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2%이므로 국내총생산은 증가했다.

오답 ① 경제성장률이 +이므로 경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10년 물가상승률이 4%이므로 물가수준은 높아졌다.

④ 명목경제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이다. 그러므로 2012년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5%이다.

1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법과 정치 :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요소]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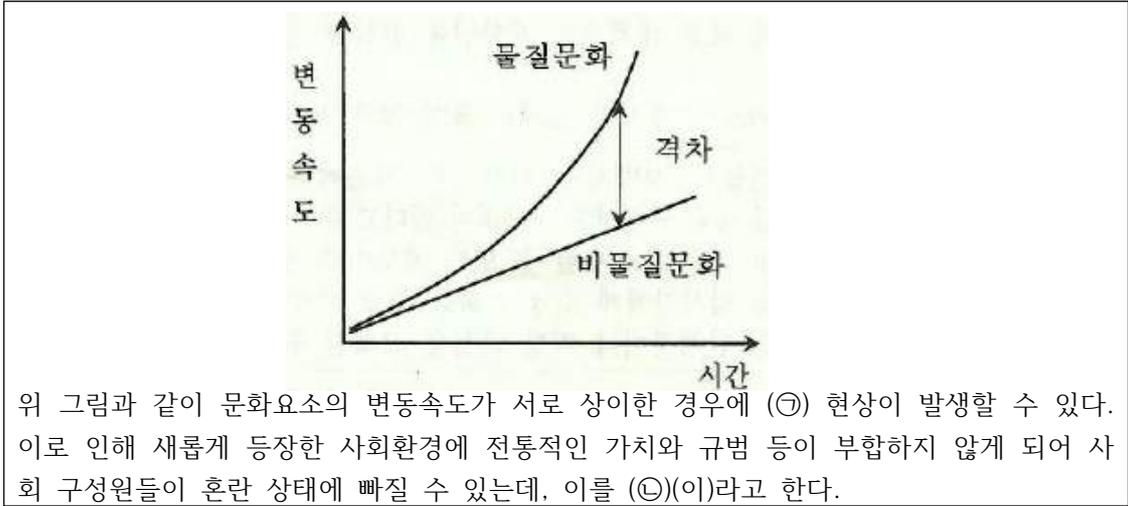
정답 ③ 국무회의, 국무총리제, 의회의원과 내각각료의 겸직가능,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①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정부형태와 관련이 없다.

②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1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사회문화 : 문화지체와 아노미]

㉠의 현상은 물질문화의 변동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고, ㉡은 무규범의 혼란이므로 아노미 현상이다.

정답 ① 문화지체는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오답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에 따른 아노미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뒤르켐이다.

③ 아노미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파악한 것은 머튼이다.

④ 제도도입(제도문화)에 비해 경제적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기술지체이다.

1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 : 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문화 :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갑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므로 기능론적 관점이고, 을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전하는 구실로 보므로 갈등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계층제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오답 ① 계층제도가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② 계층제도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④ 계층제도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14. 다음 사례에서 A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A 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 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다.

- ① 6,000만 원 ② 7,000만 원
- ③ 9,000만 원 ④ 1억 5,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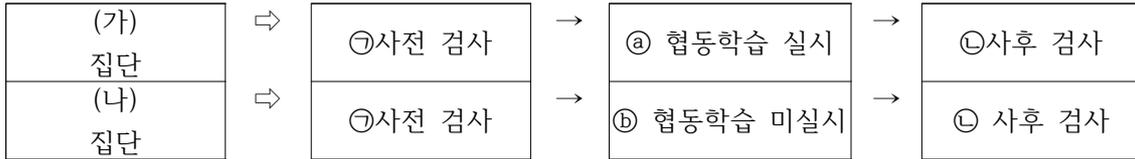
[법과 정치 : 상속]

법정상속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서 받는다.

정답 ④ A씨의 상속의 경우 아들과 딸, 아내가 상속 1순위이고, 아내가 5할을 가산해 받으므로 아들 6,000만원, 딸 6,000만원, 아내 9,0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 아들도 사망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어머니인 A씨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된다.

때문에 총상속액은 1억 5,000만원이다.

1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 : 실험법]

실험법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 ④ ㉡와 ㉢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작과정이다.

오답 ① (가)집단은 독립변인을 조작한 실험집단, (나)집단은 변인을 통제하고 있는 통제집단이다.

② 사전검사는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해 다른 변인을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이다.

③ (가)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더 낮아진 것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1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복지급여 지급 사유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
- △△복지급여액
최저 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사회문화 : 공공부조]

제시문은 긴급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정답 ②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오답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은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③ 혜택의 비효율성이 높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는 사회보험이다.

④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로 제시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과 정치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정답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의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대헌장 (영국, 1215)	(가) →	권리장전 (영국, 1689)	(나) →	인권선언 (프랑스, 1789)	(다) →	바이마르헌법 (독일, 1919)	(라) →
-------------------	----------	--------------------	----------	------------------------	----------	----------------------	----------

-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법과 정치] 기본권의 종류

(라) 시기에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정답 ④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이다.

오답 ① 신체적 자유권의 내용이다.

② ③ 정신적 자유권의 내용이다.

1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B검사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와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인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 조항인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 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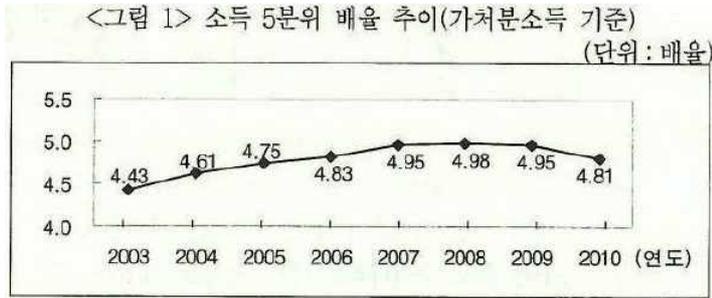
- ① 헌법소원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법과 정치 : 헌법소원심판]

제시문의 사례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경우 A가 제기할 수 있는 헌법심판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정답 ①

2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 소득 5분위 배율: 5분위(상위 20%)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 1)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 ①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② 2003년 ~ 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경제 : 소득분배지표]

정답 ③ 2009년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크기의 50%인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크기므로 전체인구의 15.3%이다.

오답 ① 소득 5분위배율만으로 소득의 크기는 알 수 없다.

②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20%소득/하위 20%의 소득이므로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하다. 2003년에서 2008년에는 5분위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개인 평균 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